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사회

해설편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 문항집

2021~2026 · 40문항 · 2과목 6개년 · 전 학년도 예시답안·출제 정보 수록

목차

2026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두 관점의 비판	5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의 가능성	5

2026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판단 과정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9
문제 2	두 인지 성향의 사회적 기여	9

2025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번역에 대한 세 입장 비교와 타당성	13
문제 2	번역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역사 해석	13

2025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부두 죽음과 물가 안정 목표제 비교	16
문제 2	차별의 악순환 해결을 위한 노력	16

2024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역사학의 허구성과 그 구체적 사례	19
문제 2	다른 학문 분야에 나타나는 혼종성	19
문제 3	믿음과 신뢰로 본 낯선 이의 길 안내	20
문제 4	신뢰가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	20

2024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선택편향의 공통점과 차이점	23
문제 2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 제시	23
문제 3	소득과 역량으로 본 혼잡 문제	24
문제 4	실업수당의 효과와 한계	24

2023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환경정책 수립 시 유념점 비교	27
문제 2	(다)의 화자 앞에서의 변호	27
문제 3	독자와 저자 관계의 비교	28
문제 4	(다)의 맥락에서 본 독자 이해	28

2023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CPI 물가 파악 방식의 한계점	31
문제 2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	31
문제 3	과학적 합의에 대한 견해	32
문제 4	과학적 합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가	32

2022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우정에 대한 (나)의 입장	34
문제 2	존엄한 사회에 더 절실한 견해	34
문제 3	표상된 이미지와 객관적 사실	34
문제 4	저자의 감정과 문학 작품 사례	35

2022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회사법 개정의 영향과 기업의 동기	37
문제 2	정부·기업의 역할 구분과 회사법 평가	37
문제 3	(가)의 사태에 대한 (나)·(다)의 입장	38
문제 4	㉠과 ㉡ 중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38

2021학년도 · 인문학

문제 1	두 사례에 대한 (가)·(나)의 평가	41
문제 2	대중 만족과 예술적 도전의 중재	41
문제 3	작가의 자질, 차이점과 공통점	41
문제 4	문학 밖의 자질과 공동체 적용	42

2021학년도 · 사회과학

문제 1	시장과 자유의 관계 이해	44
문제 2	(가)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44
문제 3	선택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44
문제 4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과 근거 자료	45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6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두 관점의 비판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의 가능성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2문항

II. 예시답안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두 관점의 비판

문제 1

※ (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구성한 예시답안이다.

논지

도덕적 이해의 본질은 추론이 아니라 일인칭적 경험에 있다. 따라서 도덕적 이해를 “왜 그런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하고 이유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환원하는 (가)의 관점은, 이해의 원천이 되는 체험적·감정적 충위를 누락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근거 — (나)에 입각한 (가) 비판

첫째, (가)는 도덕적 이해를 명제적·추론적 능력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나)의 오웰 사례가 보여 주듯, 사형의 그릇됨에 대한 이해는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일인칭적 경험 속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오웰은 “이유를 따져 추론”하지 않았음에도, 물웅덩이를 피하는 사형수를 본 그 순간 “만조에 다다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의 불가사의함”을 깨달았다. 즉 추론 능력의 확장 없이도 도덕적 이해는 성립하며, 이는 추론을 이해의 필요조건으로 삼는 (가)의 전제가 지나치게 강함을 보여 준다.

둘째, (가)의 추론 모형은 이해의 발생적 순서를 전도시킨다. (가)의 반려견 사례에서 “개는 고통을 느끼는 의식적 존재”라는 전제가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먼저 고통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근본적 이해 자체는 추론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말하는 체험적 자각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추론은 이미 확보된 도덕적 이해를 정돈·확장하는 수단일 뿐, 이해를 최초로 산출하는 원천은 아니다.

셋째, (가)는 “유사한 이유로부터 유사한 결론을 추론”하는 일반화 능력을 이해의 징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가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사례들 사이의 도덕적 유사성 — 개와 고양이가 똑같이 고통받는 존재라는 점 — 을 감지하는 능력이 선행해야 한다. 이 감지는 형식적 추론이 아니라 (나)적 의미의 체험적 이해에 속한다.

결론

그러므로 추론 능력을 도덕적 이해의 핵심으로 보는 (가)는, 그 추론이 담고 서 있는 일인칭적·체험적 이해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추론은 이해의 결과를 표현하고 확장하는 능력일 뿐이며, 이해 그 자체의 뿌리는 경험에 있다. 이 점에서 (가)는 도덕적 이해의 필요조건과 부수적 능력을 혼동하고 있다.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의 가능성

문제 2

논지

(가)·(나)·(다)는 도덕적 이해가 성립하는 세 국면 — 이유의 이해(가), 체험을 통한 자각(나), 상상을 통한 타인 감정의 이해(다) — 을 각각 밝힌다. 문학은 독자가 인물의 상황을 일인칭적으로 체험하게 하고(나), 타인의 감정을 상상으로 재구성하게 하며(다), 그로부터 왜 그러한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납득하게 한다(가). 따라서 문학은 세 국면을 동시에 매개하는 도덕적 이해의 통로가 된다.

근거 1 — 문학은 (나)의 일인칭적 체험을 재현한다

(나)는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 일인칭적 경험임을 밝히되, 오웰처럼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해야 함을 함축하는 듯하다. 문학은 이 제약을 넘어서나. 독자는 서사 속 인물의 시점에 서서, 실제로 겪지 않은 사건을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체험한다. 오웰의 회상 자체가 하나의 산문(문학)으로서 독자에게 처형의 그릇됨을 전달한다는 사실이, 문학이 일인칭적 경험을 대리 제공함을 예증한다. 즉 문학은 (나)가 요구하는 체험적 자각을 간접 경험의 형태로 확장한다.

근거 2 — 문학은 (다)의 상상적 공감을 작동시킨다

(다)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상상을 매개로만 그 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 문학은 바로 이 상상을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장치다. 독자는 인물의 처지에 자신을 대입하여 “당사자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열정”까지 관찰자의 위치에서 느끼며, 나아가 인물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겹쳐 봄으로써 (다)가 말하는 “내재적·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을 습득한다. 문학의 다성적 시점은 편견 없는 관찰자의 상상을 연습하게 하여, 자기 감정을 반추하고 조절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른다.

근거 3 — 문학의 체험·공감은 (가)의 이해로 수렴한다

(나)의 체험과 (다)의 상상적 공감은 그 자체로

“왜 그런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하는” 이

해로 이어진다. 독자는 인물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감정을 상상한 끝에, 그 행위가 왜 옳거나 그른지를 납득하고, 유사한 상황에 그 이해를 일반화한다. 문학이 제공한 일인칭적 체험과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은, (가)가 요구하는 이유-결론의 추론적 이해가 뿌리내릴 감정적·경험적 토대를 마련한다.

결론

요컨대 문학은 (나)의 일인칭적 체험을 대리 제공하고, (다)의 상상적 공감과 내재적 관찰자의 시선을 훈련하며, 그 위에서 (가)의 언어적·추론적 이해가 성립하도록 매개한다. 세 제시문의 관점은 문학이라는 매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므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하게 뒷받침된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계열/단위	모집단위
자유전공학부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문항 해설

구분	내용
[문제 1]	행위가 왜 옳고 그른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와, 도덕적 의의를 지닌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 중 자신이 더 공감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2]	문학이 상상, 공감, 감정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와 연결시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한 근거를 살핀 독해에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기제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 (나), (다)를 모두 사용해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학의 도덕적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가), (나), (다)의 유기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지문과의 개별 비교에 주목하거나, [문제 1]에서 사용했던 (가)와 (나)의 대조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출제 의도

구분	내용
[문제 1]	도덕적 이해의 요건에 대해 (가)와 (나)가 보이는 차이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하고, 두 견해 중 하나에 입각하여 상대 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 2]	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내는 확장적·비판적·응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 근거

구분	내용
[개념]	도덕적 이해, 추론,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문학의 가치와 기능, 공감, 상상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 출처 (기타)

· 아담스미스(김광수 역),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 Alison Hills, 〈Moral Testimony and Moral Epistemology〉 (Ethics 120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09
· Paulina Sliwa, 〈Moral Understanding as Knowing Right from Wrong〉 (Ethics 127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17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6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문제 1 판단 과정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문제 2 두 인지 성향의 사회적 기여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자료·사례 해석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2문항

II. 예시답안

※ 구술 문항 특성상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 예시답안은 원자료의 정답이 아니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 예시이다.

문제 1 판단 과정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문제 1

논지

제시문 (가)는 인지적 확신의 수준이 학습·판단의 질을 좌우한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확신이 과도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과신(過信)에 의한 판단 오류**가 발생하고, 확신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보 처리가 끝없이 이어져 **인지 자원의 소모와 행동 지연**이 발생한다. (나)는 전자의 극단, (다)는 후자의 극단에 놓인 판단 과정이며, 각각의 극복 방안은 (가)가 제시한 “인지 기제의 균형”으로 수렴한다.

① (나)의 문제점 — 과신에 의한 판단 오류

(나)의 화자는 “적정 가치 모형”이라는 단일 기준을 과신한다. (가)의 틀로 보면 이는 확신이 높아져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낮춘 상태, 즉 **기준 패턴에 집중해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전형적 사례다. 그는 첨단 기술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새로운 정보)을 “거품”으로 일축하고, 단 하나의 과거 사례(2001년 폭락)만으로 인터넷 주식 폭락이라는 결론을 일반화한다. 이는 확증 편향과 표본의 협소함이라는 판단 오류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반증 정보를 차단한 결과다.

극복 방안

(가)는 “정보 수집·분석·해석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과 편향 제거 방법”을 처방한다. 구체적으로 (나)의 화자는 ㉠ 단일 모형 대신 복수의 평가 모형을 병행하고, ㉡ 자기 결론에 반하는 근거(기술 산업의 구조적 성장 요인, 이익 성장률 등)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반증적 검증을 수행하며, ㉢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아닌 충분한 표본으로 검증함으로써 과신을 낮추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해야 한다.

② (다)의 문제점 — 확신 부재에 의한 행동 지연

(다)의 화자는 상승 뉴스와 하락 뉴스를 매일 접하며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한 채 정보 처리를 무한히 지속한다. (가)의 틀로 보면 이는 확신이 지나치게 낮아 민감도가 과도해진 상태, 곧 **뇌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인지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행동이 지연되는** 부적응의 양상이다.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투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진술은 완결될 수 없는 정보 탐색이 결단을 마비시켰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투자를 하고 싶으나 아무런 투자도 못하는”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에 빠진다.

극복 방안

(다)의 화자에게 필요한 것은 민감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판단과 행동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미래의 완전한 확실성은 원리상 도달 불가능하므로, ㉠ 정보 탐색의 종료 기준(예: 핵심 변수 몇 가지의 확인)을 미리 정해 무한 탐색을 차단하고, ㉡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하려 하기보다 분산 투자·손실 한도 설정 등으로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며, ㉢ 소규모 실행 후 결과를 학습에 환류하는 점진적 의사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가)가 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판단하는” 상태로의 이동이다.

결론

(나)와 (다)의 문제점은 방향은 반대이나 뿌리는 같다 — 확신 수준이 한쪽 극단에 고정되어 학습과 행동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가)가 처방하는 해법 역시 하나로 모인다. **체계적 검증을 통해 (나)는 과신을 낮추고 (다)는 과잉 민감을 낮추어**, 정보에 대한 민감도와 판단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각자의 인지 기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 2 두 인지 성향의 사회적 기여

문제 2

논지

(나)의 “확신 기반 직관”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은 개인 차원에서는 각각 오류와 지연의 위험을 안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순기능을 수행한다. 확신에 기반한 신속한 판단은 결단과 실행을 통해 혁신을 추동하고, 불확실성에 기반한 신중한 탐색은 위험을 사전에 걸러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킨다. 두 성향은 사회를 구성하는 상보적 자원이다.

① (나) — 혁신 기반 직관의 사회적 기여: 결단과 혁신

혁신에 기반한 신속한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 아래에서도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실행을 가능케 한다.

실제 사례

초기 벤처 창업가와 이들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이 대표적이다.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한 신기술 분야에서, 창업가는 시장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투자자는 직관적 확신으로 자본을 배분한다. 만약 모두가 완전한 확실성을 요구했다면 스마트폰·전기차·바이오 신약 같은 다수의 혁신은 상용화 시점이 크게 늦춰졌을 것이다. 혁신 기반 직관은 사회의 **탐색 지평을 넓히고 변화를 선도하는** 동력으로 기여한다. 또한 재난·응급 의료처럼 즉각적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은 지연이 곧 손실이 되는 국면에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② (다) — 불확실성 기반 신중 탐색의 사회적 기여: 검증과 안정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중히 탐색하는 성향은 성급한 결정이 초래할 체계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 낸다.

실제 사례

신약의 임상시험 제도와 금융 규제 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대표적이다. 신약은 다단계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부작용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야 시판되며, 이 신중한 절차가 대규모 약화(藥禍) 사고를 예방한다. 마찬가지로 금융 규제 당국은 자산 가격의 과열 가능성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2001년·2008년과 같은 거품 붕괴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한다. 불확실성 기반 신중 탐색은 사회의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시스템의 견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결론

혁신 기반 직관(나)은 혁신과 결단을, 불확실성 기반 신중 탐색(다)은 검증과 안정을 사회에 제공한다. 어느 한 성향만이 지배하는 사회는 **무모한 거품(직관 과잉)** 또는 **변화의 정체(신중 과잉)**에 빠지기 쉽다. 두 인지 성향이 각기 다른 사회 영역—혁신 부문과 규제·감독 부문—에서 상호 견제하며 공존할 때, 사회는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경영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문항 해설

【문제 1】 (가)에 따르면 인지 성향에 따라 정보의 학습률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인지 성향에 의해 (나)와 같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무시, 자신의 모형에 대한 과신 혹은 맹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와 같이 정보에 대한 반응, 학습 지연, 직관적 판단 결여, 행동 지연 혹은 과도한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 성향의 극단적인 오류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 2】 이 문항은 두 인지 성향—(나)의 “혁신 기반 직관”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사례와 결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다.

출제 의도

【문제 1】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나)의 혁신에 기반한 직관적 인지 성향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의 인지 성향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지 성향이 사회적 구조와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했는지 묻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출제 근거

【개념】 환경 적응성, 혁신, 불확실성, 행동 지연, 판단 오류, 주식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사회과 교육과정”

자료 출처

[교과서]

저자	교과서	출판사	연도	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46-59, 72-83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46-55, 64-73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74-83, 116-129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52-61, 70-97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40-49, 68-7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40-49, 68-75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0-155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28-145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32-145쪽
이진서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34-14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6-14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2019	13-17, 27-33, 53-89, 175-181, 195-201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2019	13-31, 47-81, 169-195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9	12-21, 30-37, 52-73, 82-85, 174-183, 192-203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2019	11-33, 53-91, 171-193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2019	10-17, 28-35, 50-77, 168-175, 183-19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13-49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0-51쪽
서명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20	12-47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2-47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0-47쪽

[기타]

- Karl Friston, 〈The free-energy principle: a unified brain theory?〉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2)에 수록), Nature, 2010
- Peter Dayan, Geoffrey E. Hinton, Radford M. Neal, Richard S. Zemel, 〈The Helmholtz Machine〉 (《Neural Computation》 7(5)에 수록),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
- E.S. Browning, 〈Worries Rebound on Bull's Birth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10
- N. Gregory Mankiw, Stephen P. Zeldes, 〈The Consumption of Stockholders and Nonstockhold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29, Issue 1》에 수록), 1991

2025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번역에 대한 세 입장 비교와 타당성
문제 2 번역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역사 해석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2문항

II. 예시답안

문제 1 번역에 대한 세 입장 비교와 타당성

문제 1

① 세 입장의 핵심

(가) **동화(귀화)주의**. 번역문은 목표 언어의 독자에게 원작처럼 자연스럽게 유려하게 읽혀야 한다. 번역 특유의 어색함을 지우고 가독성과 소통을 최우선에 둔다. 독자역을 배격하고 일상어로 옮기라는 돌레의 원칙이 그 근거로, 번역의 무게중심을 **도착어·독자** 쪽에 둔다.

(나) **이화(이국화)주의**. 번역문에는 반드시 이국성이 남아 있어야 하며, 완전히 귀화한 번역은 진정한 번역이 아니다. 알기 쉽게 하는 일과 원작의 자태를 보존하는 일이 충돌할 때, 후자를 지켜 때로는 매끄럽지 못한 번역을 감수한다. 무게중심을 **출발어·원작의 타자성** 쪽에 둔다.

(다) **언어적 잠재성의 해방**. 번역은 의미 전달을 넘어, 원어의 음성·운율·표현적 이질성을 모국어에 수용시켜 모국어를 확장·심화하는 동시에 원문에 잠재했던 의미까지 새롭게 발견한다. 번역가는 창조자이되 그 창조는 원문을 벗어난 유희가 아니라 **원어와 번역어 양쪽**의 잠재성을 해방하는 데서 온다.

② 공통점과 차이점

세 입장은 모두 번역을 단어의 기계적 치환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창조적·해석적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가)와 (다)는 독자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차이는 **번역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갈린다. (가)는 도착어·독자(가독성)에, (나)는 출발어·원작(이국성 보존)에 둔다. 두 입장은 ‘귀화 대 이국화’라는 대립축을 이룬다. (다)는 이 대립을 한쪽의 승리로 해소하지 않고, 원어와 번역어가 서로를 확장시키는 상호 작용으로 **지양(止揚)**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 타당성 판단 (독서 경험 근거)

세 입장 모두 일면의 진실을 담지만, 나는 (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번역 시집을 읽으며 원어의 낯선 어순과 리듬이 그대로 살아 있는 구절에서, 익숙한 모국어가 미처 담지 못했던 결이 새로 열리는 경험을 했다. 그 낯센은 (가)가 우려하는 ‘어색함’이 아니라 (다)가 말하는 모국어의 확장이었고, 동시에 원문 자체도 번역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읽혔다. 즉 이국성의 보존((나))과 가독성((가))은 서로 배타적 목표가 아니라, 두 언어의 잠재성을 함께 끌어내는 (다)의 관점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 다만 대중적 실용 번역처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 텍스트에서는 (가)의 유창성이 더 우선될 수 있음도 인정한다.

문제 2 번역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역사 해석

문제 2

전제: 역사 해석 = 번역

상자 속 제시문은 ‘과거의 사실 = 원문’, ‘역사가의 서술 = 번역문’으로 놓는다. 사료(과거)는 그 자체로 말하지 않고 역사가의 언어로 옮겨질 때 비로소 의미를 얻으므로, 번역가의 태도 차이는 역사가의 해석 태도 차이로 그대로 옮겨진다.

(가) 동화주의적 역사 해석 — 현재주의

과거를 오늘의 언어·개념·가치로 매끄럽게 재구성하여 현재의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예컨대 조선의 통치 기구를 ‘관료제·행정 시스템’으로, 봉당 정치를 ‘정당 정치’로 옮겨 설명하는 방식이다. 소통과 이해를 높이지만, 당대에 없던 개념을 덧씌우는 시대착오(anachronism)의 위험이 있다.

(나) 이화주의적 역사 해석 — 맥락(역사)주의

과거의 낯센과 타자성을 지우지 않고 당대의 세계관·논리 속에서 이해한다. 예컨대 중세의 마녀재판을 현대의 합리성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당시의 종교적 우주관 안에서 읽거나, 조선의 신분제를 오늘의 평등 관념으로 매끈하게 바꾸지 않고 당대의 질서로 남겨 두는 태도다. 시대적 고유성을 존중하지만, 자칫 과거를 현재와 단절된 박물관의 유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다) 잠재성 해방적 역사 해석 — 과거와 현재의 대화

역사가는 사료를 벗어나지 않되, 과거와 현재를 마주 세워 사료에 잠재했던 의미와 오늘의 이해 지평을 함께 새롭게 연다. E. H. 카가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한 것이 이에 가깝다. 예컨대 여성사·미시사가 기존 사료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읽어, 지배 서사에 묻혀 있던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작업은 과거의 잠재성과 현재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확장한다.

정리

같은 사료라도 (가)는 오늘의 언어로 매끄럽게 귀화시키고, (나)는 당대의 낯섦을 보존하며, (다)는 과거와 현재를 상호 조명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번역에서의 ‘귀화-이국화-잠재성 해방’의 세 태도가 역사 해석에서 ‘현재주의-맥락주의-대화적 재해석’으로 평행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025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문제 1 부두 죽음과 물가 안정 목표제 비교
문제 2 차별의 악순환 해결을 위한 노력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사회 제도·정책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2문항

II. 예시답안

※ 예시 답안은 자체 풀이·검토 결과이며 학습용 참고 자료입니다.

문제 1 부두 죽음과 물가 안정 목표제 비교

문제 1

① ‘자기실현적 예언’의 원리

(가)의 핵심은 예측이 **개인의 머릿속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사람들의 **행동 변화라는 매개**를 거쳐 현실이 되는 데 있다. ‘집단적 예측·믿음 → 집합 행동의 변화 → 예측의 실현’이라는 삼단 구조가 성립한다. 은행 예측이 예금 인출을 낳아 건전한 은행마저 파산시키는 사례가 그 전형이다.

② (나) 부두 죽음 — 제어되지 않은 부정적 자기실현

저주(예언)에 대한 믿음이 희생자 개인을 넘어 친척·공동체 전체로 공유되고, 공동체가 그를 ‘이미 죽은 자’로 대하며 모든 사회적 유대에서 배제한다(집합 행동의 변화). 그 결과 실제 죽음에 이른다. 예측→집단적 배제 행동→죽음이라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전형적 악순환이며, **전통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공포**에 기반한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제도적 제어 없이 파국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다) 물가 안정 목표제 — 방향을 돌린 긍정적 자기실현

물가 상승 예측이 공유되면 소비 확대·가격 인상·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실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역시 자기실현적 예언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상승률(예: 2%)을 공표하면,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 예측과 행동을 조정하여 실제로 2% 내외가 달성된다. 즉 자기실현적 예언의 **메커니즘 자체를 이용**하되, 부정적 방향(과도한 물가 상승)을 긍정적 방향(물가 안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가)가 말한 ‘제도적 개입과 조정’의 구체적 사례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나)와 같긴다.

④ 비교의 요지

두 사례는 모두 ‘집단의 예측·믿음이 행동을 매개로 현실화된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원리를 공유한다. 그러나 (나)는 통제되지 않은 채 공포에 기반해 파국으로 치닫는 **부정적 자기실현**인 반면, (다)는 제도적 개입으로 그 원리를 신뢰에 기반해 바람직한 결과로 돌려놓은 **긍정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문제 2 차별의 악순환 해결을 위한 노력

문제 2

해결의 두 축

㉠은 ‘열등·반사회적’이라는 편견과 배제가 실제로 그 집단을 실패자로 만드는 차별의 자기실현적 예언이다(예: 인종·성·이민자·전과자 집단에 대한 차별). 따라서 대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공포·편견에 기반한 **부정적 예언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2) (다)의 물가 안정 목표제처럼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세 주체를 택해 설명한다.

㉡ 교육자

편견을 재생산하는 서술·태도를 걷어내고, 다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학생과 사회가 해당 집단을 ‘유능하고 협력적인 구성원’으로 기대하도록 만든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실제 성취를 끌어올리는 효과(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 자기실현의 대표적 통로로, 부정적 낙인을 긍정적 기대로 대체하는 개입이다.

㉢ 언론인

특정 집단을 범죄·실패와 반복적으로 연결 짓는 부정적 프레이밍과 보도 관행을 지양한다. 대신 그 집단의 기여·성공 사례를 균형 있게 보도하여, 대중이 공유하는 집단적 예측 자체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한다. 언론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이므로, 긍정적 예언의 확산 지점이 된다.

㉣ 정책 입안자

차별금지법·기회 균등 조치 등 제도적 개입으로 배제의 악순환을 끊는다. 나아가 물가 안정 목표제처럼, ‘이 집단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신뢰할 만한 공적 기준과 신호(공정 채용 기준, 대표성 목표 등)를 제시하여 사회 전체의 기대와 행동을 조정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신뢰를 구축해 긍정적 자기실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리

세 주체 모두 ‘편견 제어(부정적 차단) + 긍정적 기대의 사회적 구축(긍정적 활용)’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다)의 논리

를 차별 문제에 적용한 것이며, 편견을 없애 ‘객관적 중립’에 머무는 소극적 대책이나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을 넘어서는 것이다.

2024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역사학의 허구성과 그 구체적 사례
문제 2	다른 학문 분야에 나타나는 혼종성
문제 3	믿음과 신뢰로 본 낯선 이의 길 안내
문제 4	신뢰가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자료·사례 해석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오전 — 역사학의 혼종성

문제 1 역사학의 허구성과 그 구체적 사례

오전 · 문제 1

논지

(가)가 말하는 역사학의 ‘허구성’은 사실의 날조가 아니라, 확정할 수 없는 사료의 빈틈을 역사가가 특정한 관점과 서사(narrative)로 메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구성적 해석’을 뜻한다. (나)와 (다)는 동일한 재판 기록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인과 서사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 허구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근거 · 제시문 연결

역사학은 남아 있는 사료만으로는 과거의 동기·심리·인과를 온전히 복원할 수 없다. 그 빈 자리를 역사가는 인물의 내면, 사건의 원인,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로 채우며, (가)가 지적하듯 “가장 성공적인 역사서”가 “훌륭한 소설의 속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의 허구성은 사료의 왜곡이 아니라 사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내는 해석적 선택이다.

(나)의 브라우닝에게서 발견되는 허구적 요소는 학살 가담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순응·권위’에의 복종·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과 서사로 구성한 점이다. 재판 기록은 대원들의 행위와 진술을 남길 뿐,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브라우닝은 사료의 침묵을 ‘집단적 순응성’이라는 해석 틀로 메워 이야기를 완성한다.

(다)의 골드하겐은 같은 사료에서 ‘반유대주의라는 독일 사회의 특수한 신념’을 학살의 핵심 동인으로 읽어 낸다. 그가 가해자의 참회 진술을 ‘자기 변호에 불과하다’고 배제하고 냉담·잔인함을 부각한 것 역시, 사료를 선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해석적 구성이다. 곧 두 역사가의 허구적 요소는 ‘동일한 사실을 서로 다른 원인 서사로 배열한 해석의 방향성’ 그 자체다.

결론

따라서 (가)의 허구성은 사료의 빈틈을 서사로 메우는 역사 서술의 본질적 속성이며, (나)와 (다)는 같은 기록을 각각 ‘사회적 순응’과 ‘반유대주의적 신념’이라는 상반된 인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허구적 요소를 드러낸다. 이는 역사가 사실성과 허구성을 함께 지닌 ‘혼종 학문’임을 입증한다.

문제 2 다른 학문 분야에 나타나는 혼종성

오전 · 문제 2

논지

(가)가 말한 ‘혼종성’은 한 학문이 엄밀한 사실 탐구와 서사적·해석적 구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성질이다. 이 혼종성은 역사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자료(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설명 틀로 엮어야 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근거 · 예시

첫째, 경제학은 통계·계량이라는 실증적 사실을 다루지만, 그 자료를 ‘경기 순환’이나 ‘성장’이라는 인과 모형(서사)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설명이 성립한다. 동일한 지표를 두고 학파에 따라 상반된 이야기가 세워지는 것은 (나)·(다)의 대립과 구조가 같다.

둘째, 진화생물학은 화석·유전자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만, 종의 분기와 적응을 ‘하나의 진화 시나리오’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서사성이 결합한다. 의학의 진단 또한 검사 수치라는 사실을 환자의 병력이라는 이야기로 종합해 판단한다.

셋째, 법학의 판결은 증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되, 그것을 ‘사건의 전말’이라는 서사로 재구성하여 인과와 책임을 부여한다. 같은 증거로 검사와 변호인이 다른 이야기를 세우는 구조는 역사학의 혼종성과 정확히 대응한다.

결론

이처럼 사실을 수집하는 실증성과 그것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배열하는 해석성이 공존하는 한, 혼종성은 역사학을 넘어 사회과학·자연과학·응용학문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는 학문이 ‘사실을 발견하는 일’인 동시에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임을 보여 준다.

오후 — 믿음과 신뢰

문제 3 믿음과 신뢰로 본 낯선 이의 길 안내

오후 · 문제 1

논지

(가)는 ‘사실에 대한 믿음(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신뢰)’을 구별한다. (다)에서 우리가 낯선 이의 말을 따라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성립하는 행위이므로, 증거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인 ‘신뢰’로 설명된다.

근거 · 제시문 연결

(가)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은 상대의 평소 행동과 같은 증거에 바탕을 둔다. 그런데 (다)의 낯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 즉 그가 정확히 답하리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기반의 ‘믿음’으로는 그의 말을 따르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향대로 길을 가는 것은, (가)가 말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서의 신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는, 정상적으로 답해 주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기에, 증거가 없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실천이 가능해진다.

(가)는 “유진이와 친하지 않더라도” 신뢰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다)의 신뢰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타인을 기본적으로 협조적 존재로 대하는 최소한의 인간관계적 태도에서 나온다. 이것이 증거의 부재를 메우는 근거다.

결론

따라서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증거에 근거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가)가 규정한 ‘사람에 대한 태도로서의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는 낯선 관계에서도 신뢰는 행동을 이끌 수 있다.

문제 4 신뢰가 유지하는 건강한 사회

오후 · 문제 2

논지

신뢰가 두터운 사회는 속기 쉬워 거짓이 팽배할 것 같지만, (가)·(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된다. 신뢰는 배신 시 강한 대가(배신감·관계 파탄)를 부과하여 거짓말의 유인을 억제하고, 참을 말할 규범적 압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근거 · 제시문 연결

(가)에 따르면 신뢰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태도’이자 관계에 기반한다. 신뢰가 형성되면 거짓말은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배반’이 된다. 즉 신뢰 사회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 자체를 훼손하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나)는 신뢰가 깨졌을 때의 반응이 단순한 ‘실망·짜증’이 아니라 ‘배신감’임을 보여 준다. 배신감은 사실이 틀렸을 때의 반응보다 훨씬 강하고 지속적인 제재로 작동한다. 따라서 서로 신뢰하는 사회일수록 거짓이 발각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고, 이는 구성원이 거짓을 삼가고 참을 말하도록 억지(抑止)한다.

또한 신뢰가 규범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된다.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직을 택하고, 거짓을 통해 얻는 일시적 이득보다 신뢰 유지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한다. 이 상호작용이 거짓을 걸러 내고 참을 확산시킨다.

결론

그러므로 (라)의 ‘건강한 사회’는, 신뢰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다는 (가)의 통찰과 신뢰 위반이 배신감이라는 강한 반응을 부른다는 (나)의 통찰이 결합하여 유지된다. 신뢰는 거짓의 비용을 높이고 정직의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을 배제하고 참을 증진하는 자기 강화적 질서를 만든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구분	활용 모집단위
오전 (역사학의 혼종성)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자유전공학부
오후 (믿음과 신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출제 의도

구분	내용
오전	[문제 1]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제시문들의 관계·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 능력,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 능력을 평가한다.
오후	[문제 1] (가)에서 설명하는 믿음과 신뢰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력·이해력·응용력을 평가한다. [문제 2] (가), (나)를 통해 얻게 된 신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의 신뢰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 즉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 근거

구분	내용
오전	[개념] 역사, 역사관, 사실성과 허구성, 혼종성, 악의 평범성, 학문의 특성, 객관적 사실, 연구자의 해석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오후	[개념] 사람에 대한 믿음, 사실에 대한 믿음, 신뢰, 믿음, 배신감, 사회적 체제, 개인과 사회의 윤리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제시문 출처

구분	출처
오전	사라 마자(Sarah Maza),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책과함께, 2020 /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책과함께, 2023 / 대니얼 골드하겐, 《골드하겐 현상(Goldhagen Phenomenon)》과 《역사장치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의 반응 비교—》, 서양사론, 2011
오후	리처드 홀튼(Richard Holton), 《Deciding to trust, coming to believ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2, 1994

2024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문제 1	선택편향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 2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 제시
문제 3	소득과 역량으로 본 혼밥 문제
문제 4	실업수당의 효과와 한계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자료·사례 해석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 구술 문항 특성상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 예시답안은 원자료의 정답이 아니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 예시이다.

오전 — 선택편향: 안내문 스티커와 귀환 전투기

문제 1 선택편향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전 · 문제 1

논지

두 제시문 모두 관측된 자료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는 관측 대상이 비무작위적으로 스스로 선택된 데서 오는 **자기선택 편향**이고, (나)는 특정 결과를 겪은 대상만 표본에 남는 **생존편향(survivorship bias)**이라는 점에서 편향의 발생 기제가 다르다.

공통점

두 사례 모두 “눈앞에 보이는 자료가 무작위로 뽑힌 표본이 아니다”라는 데서 오류가 시작된다. 관측된 상관관계(안내문 부착↔낮은 사고율, 부위별↔총알구멍 수)를 그대로 인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누가 처치를 받고, 누가 표본에 남는가)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상관과 인과를 혼동하게 된다.

(가)의 문제점

안내문을 붙일지 여부는 운전자가 스스로 선택한다.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안내문을 붙이는 동시에 애초에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즉 안내문(처치)과 사고율(결과)이 모두 ‘운전자의 조심성’이라는 관측되지 않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고율 차이를 안내문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반대 방향의 자기선택도 가능하다 — 남이 알아서 피해 줄 것이라 믿고 오히려 부주의해지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나)의 문제점

귀환한 전투기의 총알구멍 분포만 보면 구멍이 많은 부위를 보강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표본은 ‘살아 돌아온’ 전투기만으로 구성된다. 치명적 부위(엔진 등)에 피격된 기체는 추락하여 표본에서 사라지므로, 귀환기에서 구멍이 적게 관측된 부위야말로 맞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취약 부위다. 따라서 보강해야 할 곳은 구멍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적은 곳이라는, 직관과 반대되는 결론이 옳다.

차이점

(가)는 표본에 모든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치의 배정이 무작위가 아니어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특성이 다른 **자기선택 편향**이다. (나)는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결과(추락)를 겪은 대상이 체계적으로 누락되는 **생존편향**이다. 전자는 “누가 처치를 받는가”가, 후자는 “누가 자료에 남는가”가 왜곡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결론

두 사례는 “관측된 자료는 무작위 표본이 아닐 수 있다”는 공통 교훈을 준다. 올바른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가)에서는 교란변수를 통제하거나 무작위 배정 실험이 필요하고, (나)에서는 표본에서 빠진 관측치까지 포함하는 전체 모집단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2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 제시

오전 · 문제 2

논지

(가)의 자기선택 편향과 (나)의 생존편향은 일상과 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 아래 사례들은 각각의 편향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다.

(가) 유형 — 자기선택 편향

“헬멧을 쓴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율이 낮으니 헬멧이 사고를 예방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헬멧 착용은 본인이 선택하며,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헬멧을 쓰는 동시에 애초에 방어적으로 주행한다. 또 “특정 건강식품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관측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 식품을 챙겨 먹는 동시에 운동·금연 등 다른 건강 행동도 함께 실천하기 때문일 수 있다. 처치와 결과가 모두 관측되지 않은 성향에서 비롯되므로 인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와 구조가 같다.

(나) 유형 — 생존편향

“성공한 창업가 대부분이 대학을 중퇴했으니 중퇴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성공한 창업가만 관찰하면 중퇴자가 눈에 띄지만, 중퇴 후 실패하여 사라진 다수는 표본에 남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이 튼튼하니 옛 공법이 우수하다”는 통념도, 부실했던 옛 건물은 이미 무너져 표본에서 빠졌기 때문에 남은 것만 보면 생기는 착시다. 실패·소멸한 대상이 자료에서 체계적으로 누락된다는 점에서 (나)와 구조가 같다.

결론

두 유형 모두 “보이는 자료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깨운다. 눈앞의 상관관계를 인과로 속단하기 전에, 처치 배경이 무작위인지(가)와 표본에서 빠진 관측치가 있는지(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오후 — 소득과 역량: 빈곤의 측정**문제 3 소득과 역량으로 본 혼밥 문제**

오후 · 문제 1

논지

(다)의 혼밥·영양불균형·사회적 고립 문제는 ‘소득의 결핍’(가)과 ‘역량의 박탈’(나)이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설명된다. 소득은 문제의 물질적 조건을, 역량은 그 소득이 실제 삶의 기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핍을 드러낸다.

소득의 중요성(가) 적용

(가)는 소득이 물질적 풍요와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말한다. (다)에서 혼밥과 영양불균형이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충분한 소득이 없으면 단백질·채소·과일 등 균형 잡힌 먹거리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해짐을 보여 준다. 즉 소득 결핍이 곧 필수 영양 섭취의 제약으로 이어져, 건강이라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

역량의 중요성(나) 적용

그러나 (나)는 소득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역량이란 영양·건강 같은 기본 기능부터 공동체 참여·자존감 같은 사회적 기능까지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조합’이다. (다)의 혼밥이 **고연령층**에서도 두드러지고, 그 이유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69.3%)라는 점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역량**이 박탈된 상태 — 곧 사회적 고립 — 임을 보여 준다.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함께 식사하며 관계를 맺을 기회 자체가 없다면 역량의 측면에서 궁핍한 것이다.

결론

(다)의 문제는 소득 결핍(영양 구매력의 부족)과 역량 박탈(사회적 관계·참여의 부재)이 겹쳐 나타난다. 소득의 관점은 ‘무엇을 살 수 없는가’를, 역량의 관점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드러내며, 둘을 함께 보아야 혼밥 현상의 온전한 그림이 완성된다.

문제 4 실업수당의 효과와 한계

오후 · 문제 2

논지

실업수당은 (가)의 관점에서는 소득 보전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뚜렷한 효과가 있으나, (나)의 관점에서는 역량의 박탈까지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관점을 종합하면 실업수당은 필요조건이되 충분조건은 아니다.

효과 — 소득 관점(가)

실업은 소득을 끊어 생활필수품 구매를 제한하고 경제적 궁핍을 초래하는 강력한 빈곤 요인이다. 실업수당은 끊긴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여 건강·주거 등 기본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소득이 좌우하는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회복시킨다. 소득이 물질적 풍요와 주관적 안녕의 강력한 요인인 만큼, 소득 보전은 빈곤 완화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한계 — 역량 관점(나)

그러나 (나)에 따르면 소득은 역량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실업수당은 소득 기준의 빈곤은 면하게 하지만, ‘만족스러운 작업을 가질 기회’ 자체를 주지는 못한다. 제시문이 명시하듯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작업을 가질 기회는 없어도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을 통한 자존감, 사회적 참여, 자아실현 등의 역량은 수당만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이 결핍은 소득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다.

결론

실업수당은 소득 결핍이라는 물질적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분명하지만, 노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역량의 실현이라는 비물질적 결핍까지 메우지는 못한다. 따라서 소득 보전과 더불어 고용 기회 제공·직업 훈련·사회적 관계망 회복 같은 역량 확충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업이 초래한 빈곤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다.

III. 출제 정보

※ 원문에는 「활용 모집단위」·「출제 근거」 항목이 없고 「자료출처」만 수록되어 있다.

자료출처**[오전 · 교과서]**

저자	교과서	출판사	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4, 23-26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10-13, 20-27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12-14, 21-23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12-14, 22-31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11-13, 23-24쪽

[오전 · 기타]

- Steven Landsburg, 《The Armchair Economist》, Free Press, 2012
- Marc Mangel & Francisco J. Samaniego, 〈Abraham Wald's Work on Aircraft Survivability〉 i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9, No.386, Taylor & Francis, 1984
- Bill Casselman, 《The Legend of Abraham Wald》, <https://www.ams.org/publicoutreach/feature-column/fc-2016-06>, 2016

[오후 · 교과서]

저자	교과서	출판사	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1, 30-37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10-17, 26-35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14-17, 26-39쪽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12-19, 28-37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12-17, 24-3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4, 150-153, 154-165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10-13, 151-154, 155-165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12-14, 155-157, 158-169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12-14, 154-157, 158-169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11-13, 144-147, 148-16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119-122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105-108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114-117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109-112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108-111쪽

[오후 · 기타]

-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Books, 2000
- 김선엽 외,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

2023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환경정책 수립 시 유념점 비교
문제 2	(다)의 화자 앞에서의 변호
문제 3	독자와 저자 관계의 비교
문제 4	(다)의 맥락에서 본 독자 이해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오전

문제 1 환경정책 수립 시 유념점 비교

오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두 글의 공통 지반

(가)와 (나)는 모두 환경 문제를 단순한 구호나 손쉬운 상징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두 글 모두 겉으로 ‘친환경’을 표방하는 정책이나 대체물이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② 두 입장의 차이

(가)의 초점 — 생태계의 관계망. (가)는 환경정책이 개별 대상만 보고 종(種)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놓칠 때 부적절해진다고 본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농장조차 서식처와 종 간 관계를 상실하면 ‘생명의 거미줄’이 끊긴다는 것이다. 즉 정책은 생태계 전체의 구조와 연결성을 이해한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의 초점 — 인간(약자)의 삶과 실효성. (나)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처럼 상징적으로 선명한 정책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유일한 자립 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환경정책은 그 정책이 실제 사람들의 삶,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정리

(가)는 자연 생태계 내부의 관계망을, (나)는 정책이 인간 사회 특히 취약 계층에 미치는 파장을 유념하라고 요구한다. 두 글은 ‘환경정책은 표면적 선의가 아니라 그 정책이 놓인 전체 맥락(생태적 관계망·사회적 영향)을 살펴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만난다.

문제 2 (다)의 화자 앞에서의 변호

오전 · 문제 2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상황 설정 — (다)의 화자가 던지는 물음

(다)의 화자는 인간에게 살처분·탄소·폐수·삼림 파괴·해양 오염의 책임을 물으며, 인간이 자기 종의 생명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과 미래 환경을 파괴한다고 준엄하게 고발하는 ‘동물(자연)’이다. 이 화자 앞에서 (가)와 (나)의 글쓴이는 각각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변호할 수 있다.

(가) 글쓴이의 변호 — “나는 당신 편이다”

(가)의 글쓴이는 (다)의 화자에게 대체로 동조하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는 겉치레 친환경 정책이 실제로는 생태계의 관계망을 파괴한다고 이미 고발해 온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분노하는 파괴는 바로 내가 경계한 ‘빈껍데기 친환경’의 결과다. 나는 인간이 생태계 전체의 구조와 종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징적 정책에 만족하는 태도를 비판해 왔다. 당신의 고발은 나의 문제의식과 같은 방향을 향한다.”

(나) 글쓴이의 변호 — “선의에도 놓치는 생명이 있다”

(나)의 글쓴이는 (다)의 화자에게 공감하되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변호한다. 그는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빨대 금지처럼 선의로 세운 정책조차 그 빨대에 삶을 의지하는 장애인·환자를 배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온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방식이 또 다른 약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파괴를 멈추자는 대의와, 그 대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인간을 함께 살피자는 나의 요구는 모순되지 않는다. 성급하고 획일적인 정책은 자연도 인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정리

(가)는 (다)의 고발에 정면으로 동조하며 ‘얕은 친환경의 파괴성’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하고, (나)는 그 고발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약자 배려’라는 단서를 덧붙여 자신을 변호한다. 두 글쓴이 모두 (다)의 문제의식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가)는 생태적 관계망의 이해를, (나)는 인간 사회 내부의 약자까지 아우르는 신중한 실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변호의 결이 갈린다.

오후

문제 3 독자와 저자 관계의 비교

오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공통점 — 독자를 창작의 능동적 주체로

(가)와 (나)는 모두 독자를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능동적 주체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두 글 모두 작품의 의미가 저자 한 사람에게서 고정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읽기를 통해 비로소 살아난다고 본다.

② 차이점 — 저자의 위상 처리

(가) — **저자의 죽음.** (가)는 독자의 탄생을 위해 저자의 권위(신화)를 적극적으로 전복해야 한다고 본다. 독자는 이미 씌어진 것들을 새롭게 엮는 자이며,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즉 저자와 독자를 대립·교체의 관계로 놓는다.

(나) — **저자와 독자의 협력.** (나)는 저자를 죽이지 않는다. 작품은 작가가 독자에게 보내는 ‘호소’이며, 창작은 작가가 시작하고 독자가 완성하는 공동의 작업이다. 저자와 독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협력의 관계다.

③ 정리

두 글은 독자를 의미 생성의 능동적 주체로 본다는 데서 만나지만, (가)는 저자의 권위를 지워야 독자가 산다는 대체(代替)의 논리를, (나)는 저자의 호소가 있어야 독자의 완성이 성립한다는 협력의 논리를 취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문제 4 (다)의 맥락에서 본 독자 이해

오후 · 문제 2

공통된 이해 방식의 요약

(가)와 (나)는 모두 ‘독자를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완성하는 주체’로 본다. 이 관점에서 텍스트의 가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독자의 읽기라는 행위 속에서 생성된다.

(다)의 관점 — 가치는 누가·어떻게 생성하는가

(다)는 고전이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관심에 따라 ‘선별’된 것이며, 그 선별에 작가·소비자·청중은 물론 후원자·학교·출판사·정치단체 같은 제도와 기관이 적극 개입한다고 본다. 즉 텍스트의 가치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존·전달하는가라는 사회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결정된다.

평가 — 성취와 한계

(다)의 맥락에서 보면 (가)·(나)의 이해 방식은 절반의 진실을 담는다. **성취:** 의미를 저자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독자의 능동성을 부각한 점은, (다)가 강조하는 ‘가치의 생성적·관계적 성격’과 맞닿는다.

한계: 그러나 (가)·(나)의 ‘독자’는 역사·계급·제도로부터 벗어난 추상적·개별적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 (다)의 시각에서 보면, 독자의 읽기 자체가 이미 어떤 작품이 ‘고전’으로 선별되고 유통되도록 만든 제도와 권력의 산물이다.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어떤 독법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지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독자란 존재하기 어렵다.

정리

따라서 (가)·(나)가 부여한 독자의 능동성은, (다)가 드러내는 가치 생성의 사회적·제도적 조건 위에 놓일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된다. 독자는 의미의 능동적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그 독서를 가능케 한 선별·유통의 제도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구분	활용 모집단위
오전 (환경 정책과 독자)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간호대학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사회교육과·역사교육과·지리교육과·윤리교육과·체육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 자유전공학부
오후 (독자와 저자의 관계)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제외)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윤리교육과

2023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문제 1	CPI 물가 파악 방식의 한계점
문제 2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 3	과학적 합의에 대한 견해
문제 4	과학적 합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가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자료·사례 해석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 구술 문항 특성상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 예시이다.

오전 — 물가·시장가격

문제 1 CPI 물가 파악 방식의 한계점

오전 · 문제 1

논지

CPI는 고정된 품목 바구니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물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대체 행동, 품질 저하, 시장 왜곡, 그리고 가계별 소비구조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나)·(다)·(라)는 이 한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드러낸다.

근거 1 — (다): 품질 저하와 시장 왜곡의 미반영

월세통제 아래에서 명목 월세는 상한선에 묶여 낮게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건물 유지·보수가 부실해져 주거의 '질'이 떨어졌다. CPI는 지불한 명목 가격만 집계할 뿐 동일 화폐로 누리는 재화·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포착하지 못한다. 즉 표면적 물가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생계비는 상승하는 괴리가 발생한다. 웃돈을 주고 들어오려는 초과수요 역시 공식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근거 2 — (나): 숨은 가격 인상(양 축소)의 미반영

분식집은 떡볶이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1인분의 양을 줄였다. 단위 가격(1인분 값)은 불변이므로 CPI 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 금액으로 얻는 양이 줄어 단위량당 가격은 상승했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의 은폐된 인상은 고정 품목·고정 규격을 전제로 하는 CPI가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다.

근거 3 — (라): 가계별 소비구조 이질성의 미반영

CPI의 가중치는 '평균적' 가계의 지출비중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지출구조가 평균과 다른 가계에는 부정확하다. 1인 가구, 유아·취학자녀 가구, 저소득층·고소득층은 품목별 지출비중이 크게 다르다. 예컨대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담배·쌀·채소 가격이 급등하면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평균 CPI보다 훨씬 높아지지만, 단일 CPI는 이 차이를 평균 속에 묻어버린다.

결론

결국 (가)의 CPI 기반 파악 방식은 대체효과, 품질 변화, 은폐된 인상, 가계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생계비 변화를 과소·왜곡 측정할 수 있다. CPI에 연동된 국민연금·최저생계비 조정이 특정 집단의 실질 구매력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 한계다.

문제 2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

오전 · 문제 2

논지

물가 상승은 모든 가계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바구니가 다르고 자산·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대체로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근거 1 — 이질적 물가 부담(소비 측면)

(라)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담배·쌀·채소 등 필수재의 지출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은 해외여행·고급주류·골프 회원권 등 선택재 비중이 높다. 필수재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반면, 선택재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쉽다. 따라서 필수재 중심의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 실질소득을 더 크게 잠식하여 불평등을 확대한다.

근거 2 — 저축·자산 측면의 격차

물가 상승은 화폐(현금·예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린다. 저소득층은 자산 대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반면, 고소득층은 부동산·주식 등 실물·명목 방어 자산을 보유해 물가 상승분을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쇄하거나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자산 구성의 차이가 불평등을 키운다.

근거 3 — 반론 여지와 조건

다만 물가 상승이 항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임금이 물가에 빠르게 연동되는 저소득 노동자라면 실질소득 손실이 완화될 수 있고, 채무를 진 가계라면 실질 채무 부담이 줄어 유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은 소득·자산·부채의 분포와 임금의 물가 연동 정도에 달려 있다.

필요한 가정·자료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1) 소득분위별 품목 지출비중 자료(가계동향조사) — 필수재 가격 상승이 어느 분위에 집중되는지 확인. (2) 소득분위별 자산·부채 구성 자료 — 인플레이션의 자산 효과 방향을 판별. (3) 소득분위별 임금의 물가 연동 속도. 아울러 ‘단기적으로 임금은 물가에 즉각 연동되지 않는다’, ‘필수재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라는 가정을 명시해야 논지가 성립한다.

오후 — 과학적 합의와 정책

문제 3 과학적 합의에 대한 견해

오후 · 문제 1

논지

나는 과학적 합의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재현 가능한 증거가 폭넓게 축적된 결과로서 형성된 합의는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식이라고 본다. (다)의 극단적 부정은 합의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근거 1 — (다)의 통찰과 그 한계

(다)는 타당한 지적을 담고 있다. 과학의 진리성은 다수결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증거로 결정되며, 갈릴레오처럼 단 한 명의 연구자가 통설을 뒤집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다)는 ‘정치적 합의’와 ‘과학적 합의’를 혼동한다. 과학적 합의는 표결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다수의 검증과 재현이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 결과다. 즉 합의는 진리의 원인이 아니라, 축적된 증거가 남긴 결과적 흔적이다.

근거 2 — (가)의 수치 해석

(가)에서 입장을 표명한 논문(32.6%) 중 97.1%가 인간에 의한 온난화를 지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66.4%는 반대가 아니라, 이미 정립된 전제를 재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독립적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결론의 재현성과 견고함을 방증한다.

결론

따라서 과학적 합의는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권위가 아니라, 반증에 늘 열려 있는 잠정적이며 현재로서 가장 근거가 탄탄한 결론이다. 합의를 진리와 동일시하는 태도도, (다)처럼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태도도 모두 극단이며, 증거의 무게에 비례해 신뢰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다.

문제 4 과학적 합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가

오후 · 문제 2

논지

과학적 합의는 정책 결정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불확실성 아래에서 사회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근거가 된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위험이 걸린 사안일수록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는 정책의 정당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근거 1 —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긍정 사례)

(가)가 보여주듯 인간에 의한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압도적이다. (나)가 지적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협약(파리협정 등)은 이 합의를 근거로 삼았다. 기후 위험은 비가역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서 ‘완벽한 확실성’을 기다리다가는 대응 시기를 놓친다. 이때 폭넓은 합의는 예방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정당한 토대가 된다.

근거 2 — 합의를 맹신할 때의 위험 ((다)의 교훈)

다만 (다)의 경고도 정책에 필요하다. 과거 특정 시기의 ‘주류 합의’가 이후 뒤집힌 사례가 있으므로, 정책은 합의를 근거로 삼되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합의의 ‘강도’(재현성·독립성)를 확인해야 하며,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으로 형성된 사이비 합의와 진짜 과학적 합의를 구별해야 한다.

결론 — 조건부 정당성

결론적으로, 과학적 합의는 정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격은 조건부다. (1) 독립적 검증으로 재현된 견고한 합의일 것, (2) 위험이 크고 비가역적일수록 예방적으로 활용할 것, (3) 반증에 열린 자세로 지속 갱신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할 때 과학적 합의는 (가)·(나)의 기후 정책처럼 정당한 근거가 되며, (다)의 경계는 그 합의를 오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

2022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우정에 대한 (나)의 입장
문제 2	존엄한 사회에 더 절실한 견해
문제 3	표상된 이미지와 객관적 사실
문제 4	저자의 감정과 문학 작품 사례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자료·사례 해석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오전

문제 1 우정에 대한 (나)의 입장

오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나)는 (가)의 ‘차이 존중’을 편애로 재규정하며 반박한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가)가 예찬하는 우정은 곧 (나)가 경계하는 ‘편애(偏愛)’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는 (가)에 대해 “가까운 이를 특별히 대하려는 태도는 공정성을 침해하며, 좋은 삶은 오히려 그 편애를 억누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비판적으로 반박할 것이다.

② 근거 — 두 글의 개념 대응

우정 ↔ 편애. (가)의 우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친구에게 더 많은 의무를 지우는 태도다. (나)는 바로 이처럼 “가까운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애로 규정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애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나)의 눈에 (가)의 우정은 공정을 가로막는 사사로운 감정이다.

판단의 순서. (가)는 친구의 ‘특별한 상황’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그를 남다른 인간으로 대한다. 반면 (나)는 “그의 선함과 옳음을 먼저 따진 뒤 행복에 관한 물음이 뒤따라 오게 하라”고 요구한다. (나)에게 (가)의 방식은 옳음보다 친밀함을 앞세우는 전도된 순서로 비친다.

③ 결론 — 확장 가능성에는 유보

다만 (가)는 우정을 ‘이방인과 친구가 될 준비’로까지 넓히려 한다. (나)는 그 지향에는 공감하되, 그것을 여전히 편애의 확대로 볼 것이다. 결국 (나)는 (가)를 향해 “가까움을 특별히 대하는 마음을 본(本)으로 삼는 한, 진정한 공정에는 이를 수 없다”고 응답한다.

문제 2 존엄한 사회에 더 절실한 견해

오전 · 문제 2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소외된 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가)가 더 절실하다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차이를 반기며 먼 타인·이방인과도 ‘친구가 될 준비’를 하라는 (가)의 견해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소외와 배제는 대개 ‘공정의 부족’이 아니라 ‘관심과 환대의 부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② 근거 — 사례를 통한 검토

사례. 이주노동자·난민,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모두와 똑같이’ 대우받으면서도 실질적 존엄을 누리지 못한다. (나)식 공정, 즉 모두를 제3자로 놓고 동일하게 대하는 태도는 이들의 특별한 처지를 보지 못한 채 방치로 귀결되기 쉽다.

(가)의 강점. (가)는 “상대의 특별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그를 ‘바로 이 한 명의 남다른 인간’으로 대하라고 한다. 소외된 이를 익명의 제3자가 아니라 구체적 이웃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환대와 상생이 가능해진다. 차이를 결핍이 아니라 반겨야 할 것으로 보는 태도가 배제를 허무는 출발점이다.

③ 결론 — (나)를 안전장치로 삼는 (가)

물론 (나)의 공정은, (가)의 우정이 ‘내 편’만 챙기는 편파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안전장치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존엄한 공동체의 동력은, 먼 타인의 차이까지 반기며 관계 맺으려는 (가)의 환대에 있다. 따라서 공정(나)을 밑절미로 하되, 소외된 이들을 실제로 끌어안는 (가)의 태도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오후

문제 3 표상된 이미지와 객관적 사실

오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나)·(다)는 사실 위에 표상을 덧씌운 텍스트다

(가)에 따르면 담론의 언어는 존재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작성자에 의해 ‘재현·표상’된다. 이 관점에서 (나)와 (다)를 보면, 두 글에는 몽골에 관한 **객관적 사실**의 층과, 유럽인의 두려움·편견이 투영된 **표상된 이미지**의 층이 뒤섞여 있다.

② 근거 — 두 층위의 분별

표상된 이미지. (나)의 “사탄의 후손”, “지옥에서 풀려난 악마”, “괴물”, “피를 마시고 사람 살을 먹는다”는 서술은 사실 이라기보다 몽골을 종교적·도덕적 타자로 악마화한 표상이다. (다) 역시 “극도로 오만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학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부정적 규정으로 몽골을 재현한다.

객관적 사실. 반면 (다)에는 검증 가능한 사실의 층도 있다. “주인에게 순종적이고”, “음식을 서로 나누며”, “추위와 더위, 굶주림을 잘 견딘다”는 서술은 유목 전사 집단의 규율과 생활상을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전한다. (나)의 ‘동쪽에서 빠르게 진격해 온다’는 대목도 팽창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③ 결론 — 표상과 사실의 공존, 그리고 재현의 권력

결국 (나)는 공포가 사실을 압도해 악마적 표상이 지배하고, (다)는 사실과 표상이 뒤섞여 있다. (가)의 말대로 두 텍스트의 ‘진실성’은 몽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유럽 작성자의 시선에 기반한다. 타자에 관한 서술을 읽을 때는 무엇이 관찰된 사실이고 무엇이 두려움이 빚은 표상인지 가려 읽어야 한다.

문제 4 저자의 감정과 문학 작품 사례

오후 · 문제 2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선택 감정과 문학 사례는 달라질 수 있다.

① 선택한 감정 — ‘두려움’

(나)의 저자가 느꼈으리라 생각하는 감정으로 ‘**두려움**’을 택한다. (나)의 서술은 미지의 침입자를 앞에 둔 사람의 공포가 언어를 지배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② 이유 — 두려움이 악마적 표상을 낳는다

(나)는 몽골을 “사탄의 후손”, “악마”, “괴물”로 그리며 그들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암석을 관통해” 다가온다고 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막을 수 없이 밀려온다는 서술은, 대상을 관찰한 결과라기보다 압도적 공포가 상상을 부풀린 결과다. 두려움이 클수록 타자는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 초자연적 위협으로 과장되어 표상된다. 곧 (나)의 극단적 이미지는 저자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증거다.

③ 문학 사례 — 공포가 타자를 괴물로 빛는 이야기

이러한 두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작품으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들 수 있다. 서구인 화자는 동유럽에서 온 이방의 백작을 인간의 법 밖에 있는 흡혈 괴물로 묘사하는데, 이는 (나)가 몽골을 그린 방식과 겹친다. 미지의 타자에 대한 공포가 그를 ‘사람 아닌 존재’로 표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두려움이 어떻게 타자의 이미지를 왜곡하는지를 나란히 보여 준다.

④ 정리

따라서 (나)의 저자가 느낀 두려움은 몽골을 악마화하는 표상의 근원이 되었고, 문학에서도 동일한 심리가 이방의 타자를 괴물로 빛어낸다. 감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필터임을, 두 텍스트가 함께 일러 준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구분	활용 모집단위
오전 (우정과 편애)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간호대학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사회교육과·역사교육과·지리교육과·윤리교육과·체육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 자유전공학부
오후 (표상과 진실)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윤리교육과·체육교육과

2022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 문제 1 회사법 개정의 영향과 기업의 동기
문제 2 정부·기업의 역할 구분과 회사법 평가
문제 3 (가)의 사태에 대한 (나)·(다)의 입장
문제 4 ㉠과 ㉡ 중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
-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자료·사례 해석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 구술 문항 특성상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 예시이다.

오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1 회사법 개정의 영향과 기업의 동기

오전 · 문제 1

논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에 나서는 동기는 (나)의 ‘시장 유인형’과 (다)의 ‘여력·경쟁 상황형’으로 나뉜다. (가)와 같은 법적 의무화는 이 두 유형의 기업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이미 CSR이 이윤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경쟁에 내몰린 기업에는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1 — (나): CSR이 이윤과 양립하는 경우

(나)의 실험은 기부에 참여한 매물이 판매 가능성과 낙찰 가격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음을 확인했다. 즉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상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CSR은 비용이 아니라 평판·차별화를 통한 ‘투자’가 된다. 이런 기업에게 (가)의 의무화는 이미 하고 있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어서, 사회적 책임과 이윤 창출이 함께 증진될 수 있다.

근거 2 — (다):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우

반면 (다)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기업이 장기적 이득을 알면서도 당장의 비용 때문에 CSR을 소홀히 함을 지적한다. 이런 기업에게 2% 의무 지출은 단기 이윤을 잠식하는 부담이 된다. 다만 (가)가 모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 기업이 홀로 비용을 떠안아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죄수의 딜레마’를 완화한다. 즉 강제 규범이 업계 전체의 저점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이로울 수 있다.

결론

따라서 (가)의 회사법 개정은, 시장 유인이 이미 작동하는 기업에는 이윤과 책임을 함께 높이고, 경쟁 압박이 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을 지우되 업계 공동의 규범을 세워 무임승차와 저점 경쟁을 억제한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수준을 끌어올리며, 이윤에 대한 영향은 기업의 동기·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문제 2 정부·기업의 역할 구분과 회사법 평가

오전 · 문제 2

논지

사회 문제 해결에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은 ‘시장 실패’를 기준으로 나뉜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공공재 문제는 정부가 규칙을 설정하여 교정하고, 기업은 그 규칙 안에서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관점에서 (가)의 회사법 개정은 정당성과 한계를 함께 지닌다.

근거 1 — 역할 구분의 원칙

기업의 일차적 역할은 재화·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 보여주듯 경쟁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자 안전·환경 같은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할 유인을 갖는다. 이런 외부효과는 개별 기업의 선의에만 맡기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가 최소 기준을 정하고 무임승차를 막는 ‘규칙 설정자’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2 — (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순이익의 2%라는 명확한 하한을 부과하고, 미집행 시 사유 공시를 요구한다. 이는 강제 획일이 아니라 ‘지출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기업 자율성을 일부 남긴다. 또한 전 기업에 일률 적용되어 (다)의 경쟁 딜레마를 완화하고, CSR을 사회 전체의 표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칙 설정 역할에 부합한다.

근거 3 — 한계와 우려

다만 우려도 있다. 첫째, 2%라는 획일적 수치는 업종·상황별 최적 지출과 어긋날 수 있고, 형식적 ‘보여주기’ 지출로 흐를 위험이 있다. 둘째, 무엇을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인정할지 모호하면 규제 준수 비용만 늘 수 있다. 셋째, 본래 시장 유인으로 자발적 CSR을 하던 (나) 유형 기업에는 오히려 자율성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결론

종합하면 (가)의 개정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정부 역할로서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획일적 비율·모호한 인정 기준·형식화 위험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출 대상과 성과를 검증하는 보완 장치와 자율적 CSR을 살리는 유연성이 함께 마련될 때 그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오후 —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문제 3 (가)의 사태에 대한 (나)·(다)의 입장**

오후 · 문제 1

논지

(가)의 사태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과 유리되자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처방이 등장한 상황이다. (나)는 대의제의 우월성을 근거로 이 처방에 비판적이고, (다)는 대선 예비경선의 사례로 직접적 방식의 위험을 경고한다. 나는 두 입장을 모두 존중하되,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장치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거 1 — (나)의 입장

(나)는 선거를 통한 엘리트 선출이 귀족주의의 통치 역량과 민주주의의 인민주권을 결합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에서 국민과 정치의 유리는 대의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로비·정치자금 같은 왜곡 때문이며, 국민투표 도입은 숙의 없는 다수결로 통치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근거 2 — (다)의 입장

(다)는 대선 후보 지명을 투표자의 손에만 맡기자 정당의 완충기 역할과 동료 평가 절차가 사라져 선동가·아웃사이더가 부상했다고 지적한다. 이 관점에서 (가)의 국민투표는 기성 정치의 여과 장치를 건너내어, 대중의 즉흥적 정서에 정책이 휘둘리고 선동가에게 문을 열어줄 위험한 처방으로 평가될 것이다.

견해

두 입장 모두 직접적 방식의 위험을 정확히 짚지만, (가)가 드러낸 ‘국민과 정치의 유리’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대의제의 정당성 위기를 방치한 채 여과 장치만 옹호하면 불신은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삼되, 로비·정치자금 규제로 대표성을 회복하고, 국민투표는 사후 견제·중대 사안에 한정해 숙의 절차와 함께 운용하는 ‘보완적 직접민주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 4 ㉠과 ㉡ 중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오후 · 문제 2

논지

(라)는 자유민주주의가 ‘권리 없는 민주주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이라는 두 극단으로 분리되는 위험을 제시한다. 나는 (가)의 사태와 연관지어 볼 때,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더 큰 위험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1 — (가) 사태와의 연관

(가)에서 국민투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처방이지만, (다)가 경고했듯 여과 장치 없는 다수결은 선동가에게 길을 열 수 있다. 즉 (가)의 흐름이 잘못 증폭되면 ‘국민의 뜻’을 앞세워 견제받지 않는 다수 지배로 치닫기 쉽다. 이는 곧 개인의 권리를 다수결로 유린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전형적 경로다.

근거 2 — 두 극단의 비교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도 위험하다. 비선출 전문가·사법기구가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침식된다. 그러나 이 체제는 최소한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방어선을 유지하며, 절차적으로 되돌릴 여지가 남는다. 반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언론·소수자·반대파의 권리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견제 장치를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다.

결론

따라서 다수결의 정당성을 무기로 개인의 권리와 견제 장치를 허무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더 근본적인 위협이다. (가)가 보여준 정치 불신은 반드시 치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이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의 축

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수의 의지와 개인의 권리가 서로를 견제하는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체제의 관건이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구분	활용 모집단위
오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아동가족학 전공, 의류학과 자유전공학부
오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 원문에는 「활용 모집단위」만 수록되어 있고 출제 근거·참고문헌 항목은 없다.

2021학년도 · 인문학 · 해설편

문제 1	두 사례에 대한 (가)·(나)의 평가
문제 2	대중 만족과 예술적 도전의 중재
문제 3	작가의 자질, 차이점과 공통점
문제 4	문학 밖의 자질과 공동체 적용

단원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적용·확장
핵심 개념	
문항 수	4문항 (오전 2 · 오후 2)

II. 예시답안

오전

문제 1 두 사례에 대한 (가)·(나)의 평가

오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다)의 두 사례는 (가)와 (나)로 각각 상반되게 평가된다

(다)에는 시민의 거부로 철거된 《기울어진 호》와 시민의 사랑을 받은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물》이라는 상반된 사례가 나온다. (가)의 ‘대중 만족’ 기준과 (나)의 ‘예술적 교육’ 기준은 이 두 사례를 정반대로 평가하며, 두 기준의 대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② 근거 — 두 잣대로 본 두 사례

(가)의 관점. 대중의 만족을 우선하는 (가)에서 보면, 《기울어진 호》는 “이질감·거부감을 주는 작품”의 전형이다. 시민의 동선을 막고 “건축 폐기물”로 여겨져 항의 끝에 철거되었으니, 공공 재정을 지출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 반면 마야 린의 기념물은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찾는 곳이 되었으므로 (가)의 기준을 충족한다.

(나)의 관점. 예술적 지향과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는 (나)에서 보면, 《기울어진 호》야말로 “무난하고 익숙한” 선택을 거부하고 공간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한 진지한 예술적 도전이다. 대중의 거부는 오히려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지 철거의 근거가 아니다. 린의 기념물 역시 관행적 영웅 서사를 깨고 ‘사람’을 기린 전문가적 성취로 높이 평가된다.

③ 결론 — 두 사례가 두 입장의 긴장을 압축한다

결국 《기울어진 호》는 (가)와 (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이고, 린의 기념물은 두 기준이 예외적으로 합치한 사례다. (다)는 대중의 수용과 예술적 도전이 늘 일치하지는 않음을, 그리고 공공미술의 가치를 무엇으로 재는가에 따라 같은 작품의 평가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 2 대중 만족과 예술적 도전의 중재

오전 · 문제 2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도전’은 살리되 ‘공유’의 조건을 절차로 보완한다

(가)의 대중 존중과 (나)의 예술적 지향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결정 권한을 곧바로 다수결에 넘기지도, 전문가에게 전유시키지도 않고, 두 요구를 시간과 절차 속에서 조화시키는 ‘숙의적 매개’ 방안을 제시한다.

② 근거 — 중재안의 세 축

첫째, 설치 전 숙의. 전문가의 예술적 판단(나)을 존중하되, 기획 단계에서 시민과 주민에게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론 과정을 둔다. (가)가 우려하는 일방적 노출을, ‘사전 이해와 참여’로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공간의 선택권. 원치 않는 시민에게도 노출된다는 (가)의 문제는, 작품의 강도에 따라 설치 장소를 달리하여 둔다. 도전적 작품은 회피 가능한 개방 공간에 두어, 마주침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예술적 실험(나)의 자리를 지킨다.

셋째, 설치 후 유예와 교육. 《기울어진 호》처럼 즉각적 거부가 있어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고, 해설·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경험할 유예 기간을 둔다. (나)의 ‘교육’ 기능을 살리되, 충분한 시간 뒤에도 공유가 실패하면 (가)의 뜻에 따라 이전·철거를 재검토한다.

③ 결론 — 대립을 절차로 흡수하는 공공성

이렇게 하면 공공미술은 대중의 수용(가)과 예술적 도전(나)을 배타적 선택지가 아니라 ‘숙의→노출 조절→유예’의 절차로 아우를 수 있다. 공유 공간의 정당성은 결과의 만족만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이해할 기회를 얼마나 열어두었는가에 따라 함께 확보된다.

오후

문제 3 작가의 자질, 차이점과 공통점

오후 · 문제 1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① 논지 — (가)는 ‘감수성’을, (나)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되 ‘자기 지움’에서 만난다

(가)와 (나)는 좋은 작가의 자질로 각각 다른 것을 앞세운다. (가)는 세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적 목적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글은 ‘자기(개인성)를 지우는 태도’라는 공통의 자질에서 만난다.

② 근거 — 차이점

(가) — 열린 감수성. (가)의 작가는 “느껴질까 말까 한 감촉에도 반응”하고,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음”을 보이며 “문혀 있던 것을 드러낸다.” 세계를 섬세히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수용적 감수성이 핵심 자질이다.

(나) — 정치적 의지. (나)의 작가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는 정치적 욕망”에서 쓴다. 전체주의에 맞서 “중요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려는 참여적·비판적 의지가 핵심 자질이다.

③ 근거 — 공통점

미적 완성에 대한 요구. (가)는 “쓸 줄 안다”는 기예를, (나)는 “글쓰기가 미적 경험이 아니라면 쓸 수 없다”며 예술로서의 완성을 모두 요구한다.

자기(개인성)의 지움. (가)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으로서” 쓴다 하고, (나)는 “자신의 개인성을 지우려 분투하지 않으면 읽을 만한 글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사사로운 자아를 넘어서는 때 비로소 좋은 글이 된다는 점에서 두 글은 만난다.

문제 4 문학 밖의 자질과 공동체 적용

오후 · 문제 2

※ 아래는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를 보인 모범 답안 예시이며, 자질 선택과 공동체 사례는 달라질 수 있다.

① 선택한 자질 — (가)의 ‘열린 감수성’

문학 밖에서도 중요한 자질로 (가)의 열린 감수성을 택한다.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음”을 알아보고 “문혀 있던 것을 드러내는” 태도는, 내가 속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특히 절실하다.

② 이유 — 감수성이 소외된 목소리를 드러낸다

학급이라는 작은 공동체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친구, 사소해 보여 지나치는 갈등이 그렇다. (가)식 감수성은 이런 ‘거의 기록되지 않은’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방치되기 쉬운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감수성은 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약한 구성원을 살피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

③ 공동체 적용 — 관찰에서 배려로

예컨대 학급 회의에서 다수의 목소리만 오갈 때, 말수가 적은 이의 표정과 침묵까지 “세심하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읽어내는 감수성은 소수 의견을 의제로 되살린다. 이렇게 감수성은 관찰에 그치지 않고 배려와 참여로 이어져, 공동체를 더 포용적으로 만든다.

④ 정리

따라서 세계를 섬세히 받아들이는 (가)의 감수성은 문학을 넘어, 소외된 것을 드러내고 함께 살피게 하는 공동체의 덕목이 된다. 좋은 글쓰기의 자질이 곧 좋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과 맞닿아 있음을, (가)의 태도가 일러 준다.

III. 출제 정보

활용 모집단위

구분	활용 모집단위
오전 (공공미술)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간호대학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사회교육과·역사교육과·지리교육과·윤리교육과·체육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 자유전공학부
오후 (글쓰기)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 사범대학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윤리교육과·체육교육과 / 자유전공학부

2021학년도 · 사회과학 · 해설편

- | | |
|------|---------------------|
| 문제 1 | 시장과 자유의 관계 이해 |
| 문제 2 | (가)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
| 문제 3 | 선택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 문제 4 |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과 근거 자료 |

-
- | | |
|-------|--|
| 단원 | 텍스트 해석·비교 · 가치·규범 판단 · 사회 제도·정책 · 자료·사례 해석 · 적용·확장 |
| 핵심 개념 | |
| 문항 수 | 4문항 (오전 2 · 오후 2) |

II. 예시답안

※ 구술 문항 특성상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 예시답안은 원자료의 정답이 아니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하나의 합리적 논지 전개 예시이다.

오전 — 시장·자유와 정치적 자유

문제 1 시장과 자유의 관계 이해

오전 · 문제 1

논지

두 저자는 모두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지만, 시장이 자유를 **실현하는가**를 두고 정반대의 입장에 선다. (가)는 시장을 자유의 **보루**로, (나)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을 자유의 **위협**으로 본다.

(가) — 시장은 자유를 지키는 장치

(가)의 저자에게 정치적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자유의 최대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다. 시장은 경제 영역을 정치권력의 통제에서 떼어내어 강제의 원천을 분산·제거하므로 자유를 **보호**한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고용주들의 유인이 정치적 배제를 무력화한 것이 바로 시장이 자유를 지킨 증거로 제시된다.

(나) — 규제 없는 시장은 자유를 위협

(나)의 저자는 ‘자유’를 시장에서 표출되는 선호의 총합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한다. 시장의 효율성은 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에게 재배치의 부담을 지우며, 이때 노동자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따라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상실시킨다.

결론

(가)는 **강제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를 기준으로 시장을 옹호하고, (나)는 **삶을 통제할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기준으로 시장을 비판한다. 두 사람의 대립은 시장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문제 2 (가)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오전 · 문제 2

논지

(가)의 저자라면, (나)가 든 블랙리스트 논의에 대해 “그 사건이야말로 시장이 자유를 지켜낸 사례”라고 응수하며, 시장을 자유의 위협으로 보는 (나)의 해석을 거꾸로 반박할 것이다.

근거 — 제시문 (가)와의 연결

(가)는 블랙리스트를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자발적 교환을 막으려 한” 반자유주의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배제가 끝까지 관철되지 못한 까닭은, 블랙리스트를 따르는 데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든 **시장** 때문이었다. 이윤 동기를 가진 고용주는 유능한 인재라면 명단에 올랐더라도 가명·우회 제작사 등을 통해 고용했고, 배제된 이들은 그렇게 일자리를 되찾아 자유를 회복했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응

(나)라면 “시장 자체가 노동자를 재배치의 위협에 노출시켜 통제력을 빼앗는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가)의 저자는, 블랙리스트 사례에서 개인을 구제한 것은 국가의 규제가 아니라 분산된 시장의 힘이었음을 지적하며, 자유에 대한 위협의 근원은 시장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라고 재반박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가)의 저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시장 규제의 근거가 아니라 **시장이 정치적 강제를 무력화하고 자유를 회복시키는 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일 것이다.

오후 — 개인의 선택과 정부의 개입

문제 3 선택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오후 · 문제 1

논지

네 제시문은 ‘개인의 선택’과 ‘정부(외부)의 개입’ 사이의 긴장을 보여 준다. 나는 “정보(외부의 개입)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조건부로 찬성**하되, 개입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정보·능력이 부족할 때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한이 정당한 경우 — (나), (다)

(나)의 아동은 스마트폰 과용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외부의 개입(사용 제한)은 오히려 개인을 보호한다. (다)는 소비자(부모·학생)의 선택권을 약화시키는 관료화의 폐해를 보여 주므로, **개입이 언제나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경고한다. 즉 개입의 정당성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제한이 부당한 경우 — (가), (라)

(가)의 지하철 파업 사례는, 습관에 갇힌 개인도 상황이 바뀌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찾아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라)의 신약 승인 규제는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선택지 자체를 없애 신약 개발을 위축시켰다. 두 사례는 설부른 개입이 **개인의 자율적 개선 능력과 선택지를 오히려 축소**함을 시사한다.

결론

따라서 정보·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은 (ㄱ) 개인의 판단 정보·능력이 구조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ㄴ) 개입의 목적이 개입받는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하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입은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효율을 함께 해친다.

문제 4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과 근거 자료

오후 · 문제 2

논지 — 조건부 찬성

나는 전염병 확산기에 한해 백신 접종을 출근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에 **찬성**한다. 문제 1에서 세운 기준(정보·능력의 결핍 + 개입 목적의 정당성)을 이 사안이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유 — 기준의 적용

첫째,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 외부효과(감염)를 미친다. (라)의 신약 규제가 당사자 본인에게만 위험이 돌아가는 것과 달리, 미접종은 동료·고객의 감염 위험을 높인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 둘째, 확산기에는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이 커 (나)의 아동처럼 개인이 위험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가)·(다)의 교훈에 따라, 이 개입은 **확산기라는 한시적 조건**에 국한되어야 하고, 평시로 돌아가면 선택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데이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 백신 접종군 대 미접종군의 감염률·전파율·중증화율 비교 데이터 (외부효과의 크기 확인)
- 접종 의무화 시행 전후의 직장 내 집단감염 발생 추이 (정책 효과 검증)
- 백신의 부작용 발생률 데이터 (개입의 비용, (라)식 위험 균형 판단)
- 의무화가 고용·소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제한의 형평성 점검)

결론

감염이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개인의 정보가 부족한 확산기에 한해, 위 데이터로 편익이 비용을 웃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백신 접종의 조건부 의무화는 정당하다.

핵심 개념 색인

각 학년도 문항이 다루는 핵심 개념과 그 개념이 등장한 학년도. 같은 개념이 여러 해에 반복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인문·사회 기출 문항집

해설편 · 2021-2026 · 40문항 · 2과목 6개년

발행일	2026년 8월 17일 초판 발행
발행인	김민용
발행처	연주미디어
연락처	blueslap@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459-94-01364

문항과 제시문의 저작권은 원 출제 기관에 있으며, 편집·구성 및 예시답안의 저작권은 연주미디어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써봄 AI 논술 자동 첨삭

쓴 글을 올리면, 바로 채점과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무료

3회 무료 분석

회원가입만 하면 3회까지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결제 정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첨삭 결과는 PDF 리포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을 점수로 보여 줍니다

- 논리 구조
- 근거 타당성
- 주장 명확성
- 언어 표현

받아 보는 것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 개선점, 구체적 제안사항**이 담긴 상세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런 분께

혼자 쓴 답안을 바로 점검하고 싶은 **수험생**, 여러 학생 글을 한 번에 채점해야 하는 **논술 교사·강사·학원**.

이용 방법

1

회원가입

이메일로 가입하면 곧바로 무료 분석 3회가 주어집니다.

2

답안 올리기

PDF · DOCX · TXT 파일을 올립니다. 한 번에 최대 10편까지 일괄 처리됩니다.

3

첨삭 받기

영역별 점수와 상세 피드백을 확인하고 PDF 리포트로 내려받습니다.



writegrow.net

QR 을 찍으면 바로 열립니다